

연금 급여 자동증가 장치와 한국 국민연금 제도 개혁, 30%수익율

Automatic Increase Mechanism in Pension Benefits and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30% return rate per year

김현탁 (Kim Hyun-Tak)^{a,b}

^aDepartment of physics, College of William & Mary, Williamsburg, VA 23185, USA

^a미국 윌리엄마리 대학 물리학과 교수, 윌리엄스버그 VA23185

^bKim Hyun-Tak Physics and Applications Lab¹, Small Hall 154, College of William & Mary, Williamsburg, VA 23185, USA

^b김현탁 물리응용연구실²

Corresponding e-mail: htkim580711@gmail.com

Upload date: October 03, 2024

[Abstract]

The government's bill presented on 4th of September in 2024 issues as it violates both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a humane life," and Article 102, Paragraph 2 of the National Pension Ac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unds), which stipulates that "to ensure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finances, its profits must be maximized." By addressing these violations, the government's bill can be finalized. To rectify the violation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n automatic pension benefit increase mechanism must be introduced. To correct the violation of Article 102, Paragraph 2 of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legal rate of return must be set at a compound interest rate of at least 20% per year, while the actual rate of return must be targeted at 25% per year or higher. An external professional fund manager will be entrusted with managing the return rates, and a highest yield bidding system will be implemented. The pension fund must be invested for a period exceeding 10 years in long-term, steadily growing assets to generate compound interest effect, without investments in bonds that do not offer compound interest benefits. The pension operating committee's authority to directly manage assets must be revoked. Legislation to support these measures must be enacted. Additionally, an example of a 30% rate of return per year will be provided.

[요약]

2024년 9월 4일 발표된 정부 법안은 헌법 34조(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국민연금법 102조 ②항(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명시된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기금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두 위반해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위반 사항을 해결하면 정부 법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헌법 34조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연금 급여 자동 증가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 102조 ②항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 수익률은 연 20% 이상의 복리로 정하고 실제 수익률은 연 25%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최상위 수익률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전문 펀드매니저에게 위탁하여 수익률을 관리해야 한다. 연금 기금은 복리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자산에 10년 이상 투자되어야 하며, 복리 혜택이 없는 채권에는 투자되지 말아야 한다. 연금 운영 위원회의 자산 직접 운용 권한만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약 30%/년 수익률의 예를 제공한다.

¹ <https://sites.google.com/view/hyun-tak-kim/>

² 김현탁 물리응용연구소, <https://sites.google.com/view/hyun-tak-kim/>

1. 24.09.04,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한 김현탁의 분석 및 개선안

정부안 “인간다운 생활” 헌법 제34조와 “수익률 최대” 국민연금법 102조 ②항을 위반함.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됨

<p>24.09.04, 정부안 확정 발표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정부안은 세대간 차별화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둠. “인간다운 생활”의 헌법정신에 중점을 뒤야함.</p>	<p>김현탁의 분석 및 개선안</p>
<p>1. 보험료율 9% -> 13% 인상 ※보험료율 인상속도는 세대별로 달리함. 단계적으로 인상 50대(66~75년생) 1% 인상 40대(76~85년생) 0.5% 인상 30대(86~95년생) 0.33% 인상 20대(96~07년생) 0.2% 인상 2040년 모든세대 13%가 됨</p>	<p>타당함 보험원금(기금)이 늘어남</p>
<p>2. 소득 대체율 40% -> 42% 인상</p>	<p>부족, 인간다운생활, 500%로 증가필요[1]</p>
<p>3. 기금소진연도 2056 -> 2072 (16년 늘어남)</p>	<p>연금법위반, 소진없이 계속 증가되도록함[2]</p>
<p>4. 기금수익률 4.5%/년 (2023년 5차 재정추계 설정) -> 5.5%/년 이상, 1% 이상 올림</p>	<p>연금법 위반, 복리, 연20%이상 (가능함), 법제정 필요 [3,4]</p>
<p>특이사항: 자동조정장치 검토예정. 이것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장치임. [복지부 전망] (1)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연도는 2088년으로 늘어남. (2) 전체 기금이 적자를 보기 5년 전인 2049년 발동하면 2079년 기금이 소진됨. (3) 적자 시작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2077년 기금이 소진됨.</p>	<p>헌법정신 악화시킴. 현재 1인 월평균 약 59만원인 데, 이 장치로 연금 수급액이 더 줄어서 국민은 더 어려워짐 -자동삭감 장치임. ※ 도리어, 자동 증가 장치가 필요함 [5]</p>
<p>지금 연금지급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음</p>	<p>타당함</p>
<p>※ 추가로, 최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 수 증감률(보험료 수입)과 기대여명 증감률(급여 지출) 등을 추가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한다는 구상</p>	<p>타당함</p>
<p>※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던 청년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지금보다 더 명확히 하는 법 제정도 추진하기로</p>	<p>타당함</p>
<p>※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함</p>	<p>타당함</p>
<p>※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부터 가입기간을 인정 구상</p>	<p>타당함</p>
<p>※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는 구상</p>	<p>타당함</p>
<p>※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p>	<p>타당함</p>
<p>※ 현재 59살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64살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함</p>	<p>타당함</p>
<p>※ 올해 최대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감액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음</p>	<p>타당함</p>
<p>※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도 활성화함</p>	<p>타당함</p>
<p>[평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쉽지 않을 것 예상. 자동조정장치는 사실상 연금액을 삭감하는 장치인데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를 두고도 이견이 크기 때문임.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과)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등은 집행 과정에서 갈등이나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치나 정부의 역량”이라고 짚었음.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개혁 논의가 흐트러질 수 있어서 시기상조”라고 말했다.</p>	

2. 정부안 분석의 세부 설명

[1] 헌법 제 34 조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4대 보험이 만들어졌으며, 그 중 하나가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이다. 즉, 국가가 국민이 내는 연금보험을 관리하고 최대 수익률로 운용하여 국민이 노후를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법을 근거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만들어 졌다. 현재 40% 대체율로 할 때,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 금액이 월 55 만원인데 부부기준 월 적정 노후 생활비는 2021년 60대 기준 288.8 만원이며 (아래 표, 국민연금공단 데이터), 2024년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300 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래서 적어도 소득 대체율을 500% (55 만원 x 5 배)까지는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1) 연령별 최소/적정 노후생활비(월평균) 「국민노후보장법」

수록기간 : 2년 2021 ~ 2021 / 자료갱신일: 2023-03-30 / [주석정보](#)

[시점](#)
[증감/증감률](#)
[행렬전환](#)
[열고정해제](#)
[새탭열기](#)
[화면복사](#)

(단위: 만원)

연령별	2021			
	2) 최소 노후생활비 (부부기준)	3) 최소 노후생활비 (개인기준)	4)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기준)	5) 적정 노후생활비 (개인기준)
계	198.7	124.3	277.0	177.3
6) 50세 미만	222.4	141.8	332.8	208.4
50대	219.3	139.1	306.8	198.3
60대	207.1	129.0	288.8	183.8
70대	181.9	113.4	251.3	161.7
80세 이상	162.3	99.9	226.8	144.0

[2] 첫째, 현재 국민연금은 DB 형으로 작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기금은 반드시 고갈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대에 반드시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으며, 저출산으로 연금을 내는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정부안은 이것을 고집하고 있다(우둔하다). 그래서 이 DB 형을 버리고 DC 형으로 전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연금 운용 목표를 법적으로 복리 연 20% 이상 실질 수익률은 복리 연 25% 이상으로 운용하여 기금이 계속 증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기금소진”은 국민연금법 102 조 ②항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라는 부분을 위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법을 지켰다면, 기금소진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안과 지금까지 연금운용은 법과 관계없이 별도로 자의적으로 제안되고 운용된 것 같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만족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하는 방법 그대로 답습한 것 같다. 이것은 법을 만든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과 같은 “불행한 일”을 만들어 냈으며 국가에 인재(人才)가 없다는 뜻이다. 안타깝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이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법 실시이후 책임자인 모든 “복지부 장관들”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치국가라면. 그리고 반성하고 법 제정을 통하여 여기에 제안된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발전, 즉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3] 국민연금법 102 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항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라는 부분은 국민연금운용지침서 제3조 기금운용목적 제3조 2항에도 나온다.

첫째, 이 부분에 모순이 있다.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물가상승률 정도만 올라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최대 수익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장기적으로 최대 수익률이 확보되면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정을 “장기적인 꾸준한 성장”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수익을 최대한 증대”에서 “최대”라는 말은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예를들면 정부안에서 수익률을 4.5%에서 “5.5%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데, 5.5%가 최소이다. 그러면 5.5%의 수익을 얻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최대”라는 의문이 생긴다. 현실적으로 최대를 정할 수가 없고,

최소는 정할 수가 있다. “최대”라는 표현 대신에 “성취가능한 목표 수익률의 최소값의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법적 목표 수익률을 “복리 연 20% 이상 (10년 519.17% 이상)”와 실질목표는 복리 연 25% 이상 (10년 930% 이상)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 목표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아래의 내용 참조). 연금운용위원회의 목표설정 업무는 사라진다.

셋째, 이와 함께 운용은 “최대 수익률 자유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선정된 외부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자산을 운용하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입찰 방법이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연금운용 위원회는 수익률이 너무 저조한 것을 볼 때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며 법을 위반했고 국민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연금운용위원회의 연금 “직접운용” 권한을 취소하고 “운용자들을 관리”만 하며, 운용은 100%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외부 운용자들의 평가는 부분적으로는 매년 하되, 최종 “10년 단위로 계약”하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도 법률로 명시해 놓아야 한다. 급여도 많이 줘야 한다. 예를들면, 일반적으로 위탁업무를 주면 급여가 싼데 그러면 일하는 분이 집중하지 못하므로 ETRI(작성자가 근무한 국가연구기관, 작성자는 20년 과제 책임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음)수준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고 대기업 자산운용사에만 줘서도 안된다. 유능한 인재로 검증이 되면 개인이라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과제를 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뽑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가 필요한 것은 그들의 재능이다. 그 재능은 비싸다.

다섯째, 연금관리 위원회에서 안전이 걱정이 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을 함께 들도록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여섯째, 국민연금운용지침서 제 14 조에 나오는 “벤치마킹지수”는 버리고 “국민연금지수”를 독자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일곱번째,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며 “투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투기를 하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장기적 고수익의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다. 국민연금지침서를 보면 복리 개념은 없고 안전성과 위험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낮은 수익률을 근거로 볼 때, “투기를 하지 않았나” 작성자는 추측한다. 연금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42년까지(18세부터 60세까지) 보험료를 매달 불입하기 때문에 “적립식 장기투자”이므로 안정적이고 복리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투자의 역사에서 최대 수익률을 얻는 방법은 “복리”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정적인 자산에 복리 투자를 해야 한다.

[4] 정부안의 수익률(4.5% 이나 5.5%이나)은 원숭이나 전문성이 없는 어린이 수준의 부끄러운 수익률이다 (인터넷에 있음). 남들은 같은 투자 금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이 연금운용위원회는 그렇게 내지 못하는 것을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법을 위반해서 자의적으로 연금을 운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운용을 법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5] 첫째, [3]에서 목표 수익률이 복리 연 20% 이상의 고수익이 확보되면, 연금 보험료 지불이 완료된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 [1]에서 제시한 수급 목표 500%에 빠르게 도달되도록, 현재 받는 연금급여 금액에 따라 수익률의 10% 이하(검토후 조정 가능)의 금액을 차기년도의 급여 금액에 추가로 더 보강하는 것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연금급여 자동증가장치). 또 나머지 수익률은 연금 보험 총 원금이 증가되도록 하여 복리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한다. 아직 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계속 복리로 굴러가도록 한다.

둘째, 코로나 버블이 붕괴하여 수익률이 크게 감소하는 것과 같이 어떤 특정 연도에 연금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금관리 운영위원회에서 10년 이상 불입되고 복리로 증가된 총보험료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지불하고 그 상황이 회복되면 이자율 포함해서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연금 수급자를 안정시키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시 연금 수급이 가능함.

셋째, 수익률이 높으면 보험료 원금의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20년 이상이 되면 약 70~100 배 30년 이상은 1000 배 40년은 10,000 배까지도 50년(수명이 늘어나므로 계속 굴러감) 10만배까지도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수익률의 2.5% 이내(검토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음)에서 “운용비용”을 사용하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넷째, 셋째에서 언급된 큰 수익률에서 2.5% 이내(검토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음)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누적 부채(2021년 12월 기준, 1735 조 정도)를 100년 목표로 조금씩 갚도록 하는

것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다섯째, 높은 수익률이 확보되면 국민은 연금백만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 해외여행 손자들 지원 등과 같이 자유롭게 연금을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사용한도를 정한 "연금카드"를 발급해 줘서 보다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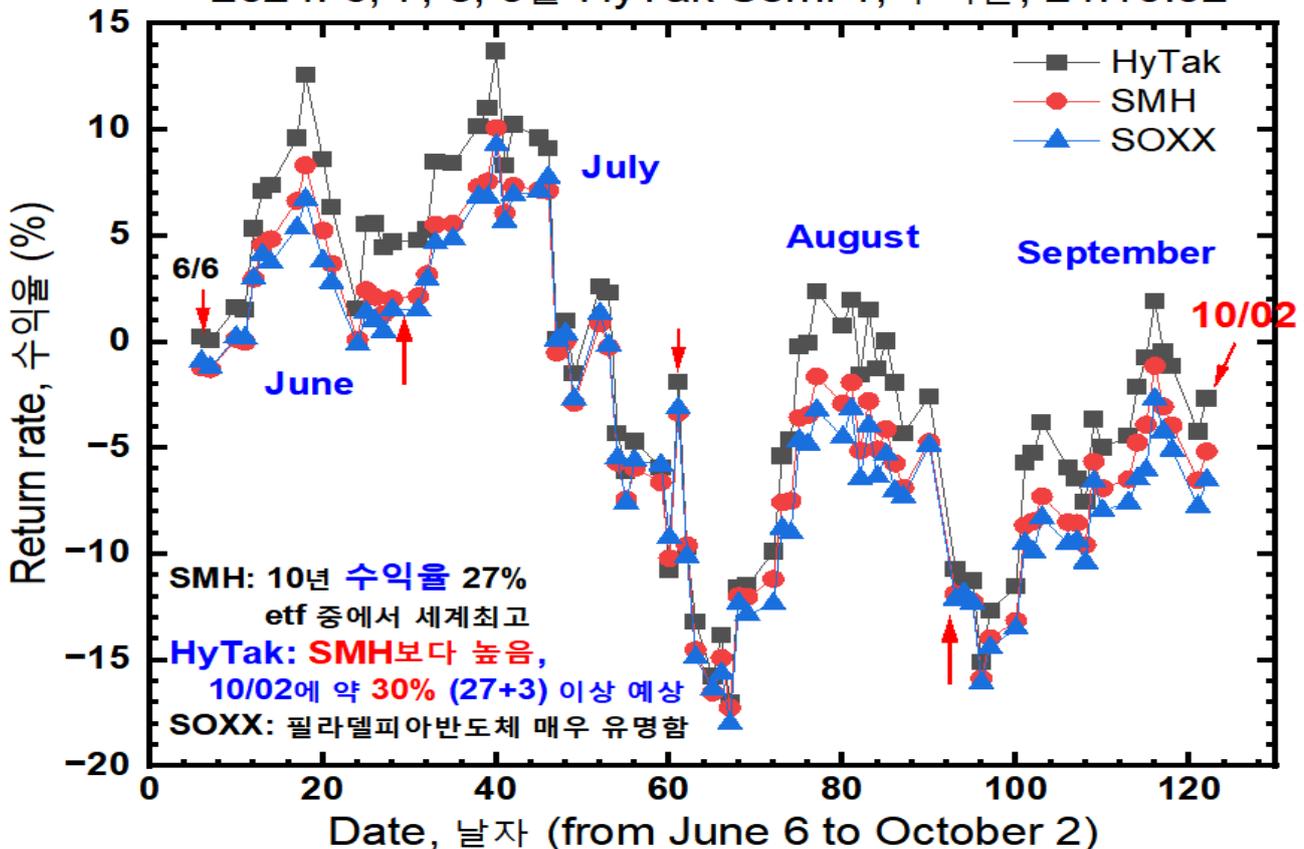
위 내용대로 제정이 되고 실행이 되면 연금 백만장자의 국민으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이 걸려지므로 국가가 부자가 되어서 기초연금도 올릴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여유가 생기므로 출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부창출로 이어져서 부강한 나라가 된다.

작성자는 "연금보험기금의 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해야만 헌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며, 이 제도 개선은 다른 퇴직연금(24.09.26. MBN 뉴스 '형편없는 퇴직연금 수익률', 2015~2022년, 퇴직연금 수익률 1.68%, 사학연금 수익률 5.17%, 공무원연금 수익률 4.51%)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의원님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논문 앞에 나온 논문을 함께 보실것을 제안드립니다 (<https://vixra.org/abs/2409.0010>)에서 V2 를 보세요.

3. 위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위한 실시 예, 복리 수익률 약 30%/년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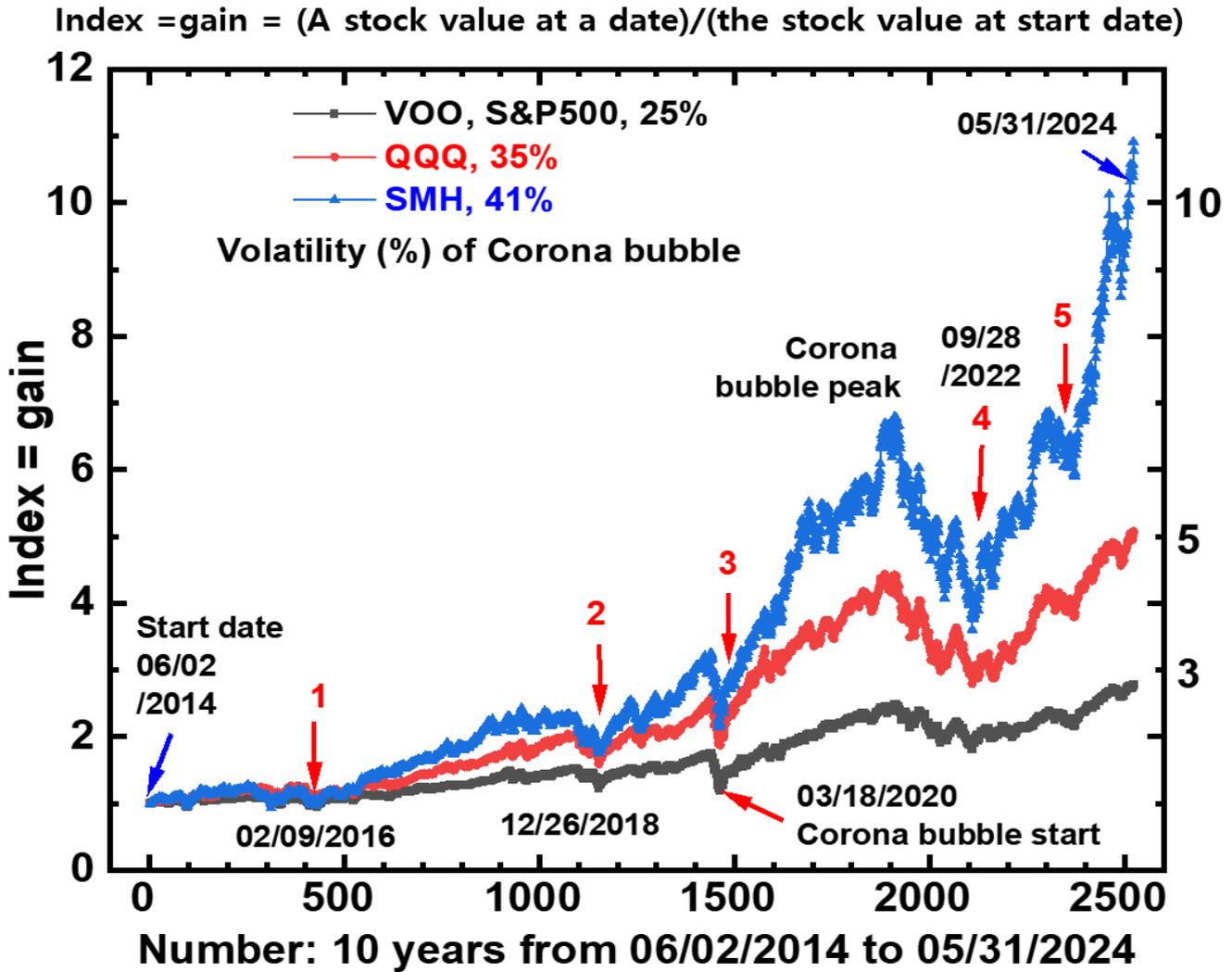
위에서 제시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의 "법적목표, 복리 20% 이상"의 달성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은 작성자가 직접 만든 세계반도체 주식으로 구성된 HyTak Semi 1 etf (HyTak 은 작성자의 이름 Hyun Tak 에서 un 을 빼 작성자의 이름, 6월 6일 시작됨)가 미국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반도체 etf, 티커명 "SMH" (한국에서 "Kodex 미국반도체 MV") 보다 24년 10월 2일에 약 3%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 Soxx 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etf 주식이다. 수익률을 보면, HyTak, SMH, Soxx 순이다. SMH의 10년 수익률은 <그림 2>에서 자세히 보여주며, S&P500의 Voo 와 나스닥 100의 QQQ 와의 비교도 함께 보여준다. 이것으로 법적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 이제 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운용지침을 수정하면 된다.

2024. 6, 7, 8, 9월 HyTak Semi 1, 수익율, 24.10.02



<그림 1> 미국 반도체 etf (상장지수펀드)의 수익률 비교. HyTak etf(6월6일 시작)가 SMH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 2024년 10월 2일(10/02)은 HyTak이 SMH 보다 약 3% 높다. 아래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SMH 는 10년 평균 27% (약 10배)의 수익률을 보여준다. HyTak이 SMH 보다 3% 더 높은 것은 HyTak의 10년 평균 이 약 30%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HyTak은 10년에 13.79배, 20년에 190배, 30년에 2620배가 예상된다.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 ETF 수익률은 <그림 2>의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5년 동안 2~3 차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경기 사이클을 겪는다. ETF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500개 회사를 포함하는 VOO (S&P 500 지수를 따름) 와 100개 기업을 포함하는 QQQ(Nasdaq 100)와 25개 회사를 포함하는 SMH(VanEck Semiconductor, 한국에서는 'Kodex 미국반도체 MV' etf에 해당됨)의 10년 평균 수익률을 검토한다. <그림 2>은 VOO는 약 270%, QQQ는 약 500%, SMH는 약 1000% 달하는 이득을 보여준다. SMH 연간 수익률은 27%이다. 그 높은 수익은 눈덩이 효과 (Snowballeffect; 복리효과)에 의해 발생한다. 수익률은 이득과 다르며, 여기서 수익률 = 이득 - 1이며, 이득은 (특정일의 주가)/(시작일 주가)로 정의된다.



<그림 2> 유명한 ETF의 지수로서의 이득: VOO(S&P 500), QQQ 및 SMH 10년 데이터. 이득은 (수익률) + 1로 정의된다. 지수의 이득 = (어떤 특정일 주가)/(2014년 6월 2일 시작일의 주가)로 정의된다. 데이터는 Yahoo Finance의 과거 데이터에서 얻은 것이다.¹⁻³ 코로나 버블 주가 변동성은 코로나 버블 피크 지점과 빨간색 화살표 4번의 낮은 지점의 차이로 측정됩니다. 이는 고수익 ETF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보여줌). SMH, QQQ, VOO는 10년 동안 각각 10배, 5배, 약 2.8배의 수익을 얻었다.

<참고자료>

- ¹ Historical data of VOO in Yahoo Finance, <https://finance.yahoo.com/quote/VOO/>.
- ² Historical data of QQQ in Yahoo Finance, <https://finance.yahoo.com/quote/QQQ/>.
- ³ Historical data of SMH in Yahoo Finance, <https://finance.yahoo.com/quote/SMH/>.

-END-